

이슈분석

# 2002년 노동시장 동향과 2003년 전망

안주엽\*

## I. 2002년 노동시장 평가

### ◆ 2002년 중 전년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2002년 초 실시된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로 반전
  - 1/4분기 중 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2/4분기에는 6.4%를 기록
- 하반기부터 경기둔화의 가능성과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
  - 하반기부터 수출이 살아나 두 자리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나 기술적 반등 효과를 고려하면 2000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
  - 3/4분기 중 성장률이 5.8%로 떨어지고 해외경기 및 미국의 이라크 침공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기 시작

### ◆ 2002년 중 취업자는 2.6% 증가하고 실업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2년 초 실시된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1/4분기 중 취업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4.0%나 증가
  - 1/4분기 중 예상보다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월과 2월 중 실업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실업률 전망을 수정발표(2002년 4월)
    - ※ 당초 2002년 1/4분기 실업률은 4.5%로 전망되었으나 실제로는 3.6%. 따라서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jyahn@kli.re.kr).

연평균 실업률 전망을 3.5%에서 3.0%로 하향조정.

※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내수 중심의 성장과 동절기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대책의 고용효과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됨.

- 1/4분기 중 취업자 증가는 건설업(전년동기대비 12.4% 증가)과 사업개인서비스업(전년동기대비 7.7%)이 주도

※ 제조업(-0.7%) 등 기타 산업에서는 고용창출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2%대로 하락

- 5월 중 실업률이 2.9%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추석효과가 포함된 9월 중 2.5%까지 하락
-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2월 4.5%에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4분기 중 2.0%로 하락하고 11월에는 1.2%로 둔화

<표 1> 2002년 노동시장의 추이

	2001	2002p	2002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2,181 (1.1)	22,585 (1.8)	22,013 (2.7)	22,846 (1.7)	22,753 (1.5)
참가율	60.8	61.3	60.0	62.1	61.7
취업자	21,362 (1.4)	21,908 (2.6)	21,216 (4.0)	22,186 (2.3)	22,134 (2.0)
실업자	819	678	797	660	619
실업률	3.7	3.0	3.6	2.9	2.7
비경제활동인구	14,303 (0.8)	14,248 (-0.4)	14,693 (-1.6)	13,940 (-0.2)	14,114 (0.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10월 말부터 2003년 경기의 불투명을 의식한 기업이 신규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표출하기 시작

- 신규학졸 청년층의 취업난이 언론과 채용정보회사를 중심으로 이슈화되기 시작
- 이러한 현상은 매년 11월경에 항상 나타난 현상이나 최근 3년을 중심으로 보면 점차 나아진 형국임.
- 그러나 여전히 신규학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화하는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

- 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이 진행됨
  - 1/4분기 내수주도의 경기회복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9.6%나 증가하였으며 2/4분기와 3/4분기에도 각각 9.6%와 7.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율은 1/4분기에 2.1%, 2/4분기에는 0.8%, 3/4분기에는 1.6%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51%에 머물던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11월 현재 52.2%를 기록

<표 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

(단위: 천명, %)

	2001				2002			11월
	1/4	2/4	3/4	4/4	1/4	2/4	3/4	
취업자	20,403 [0.4]	21,677 [1.9]	21,694 [1.4]	21,673 [1.9]	21,216 [4.0]	22,186 [2.3]	22,134 [2.0]	22,066 [1.2]
임금근로자	12,879 [0.1] (63.1)	13,483 [2.1] (62.2)	13,410 [1.8] (61.8)	13,583 [2.1] (62.7)	13,484 [4.7] (63.6)	13,882 [3.0] (62.6)	13,820 [3.1] (62.4)	13,941 [2.2] (63.2)
상용직의 비중	49.6 [4.2]	48.7 [5.4]	48.6 [3.8]	48.1 [2.4]	48.3 [2.1]	47.7 [0.8]	47.9 [1.6]	47.8 [2.2]
임시직의 비중	34.7 [-0.2]	34.4 [2.9]	34.3 [1.8]	34.6 [3.3]	34.8 [4.9]	34.4 [2.8]	34.3 [3.0]	34.2 [1.3]
일용직의 비중	15.8 [-10.7]	16.9 [-7.9]	17.1 [-3.7]	17.4 [-1.5]	16.9 [12.5]	18.0 [9.6]	17.8 [7.4]	18.0 [4.3]

주:( )안의 수치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근로자수의 증가율.

◆ 최근 명목임금 상승률이 두 자리수를 기록

- 경기의 급속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2001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2.4시간 감소하였으며 금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평균 4.4시간이나 감소
  - 근로시간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에 시작된 급속한 경기회복세로 명목임금의 상승이 가속화되는 추세
    - ※ 2/4분기와 3/4분기에 11.0%와 11.2%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실질임

금도 8% 이상 상승하여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수준이 급상승  
 ※ 산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제조업 역시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10.7%, 11.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표 3> 최근의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 천원, 원, %)

	2001					2002		
	연 간	1/4	2/4	3/4	4/4	1/4	2/4	3/4
명목임금(천원)	1,752 (5.0)	1,718 (7.8)	1,675 (4.0)	1,793 (4.2)	1,825 (4.6)	1,862 (8.4)	1,860 (11.0)	1,994 (11.2)
근로시간(시간)	202.4 (-1.2)	198.8 (-3.1)	203.7 (-0.1)	204.2 (1.2)	203.2 (-2.5)	193.6 (-2.6)	202.2 (-0.7)	197.6 (-3.2)
실질임금(천원)	1,683 (0.9)	1,670 (4.0)	1,609 (-1.0)	1,713 (0.1)	1,746 (1.2)	1,765 (5.7)	1,740 (8.1)	1,856 (8.4)
시간당 실질임금(원/시간)	8,315 (2.1)	8,398 (7.3)	7,899 (-0.9)	8,386 (-1.2)	8,595 (3.8)	9,116 (8.5)	8,605 (8.9)	9,395 (12.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노사분규가 급증한 가운데 협약임금 인상률이 상승

- 2002년 11월 30일 현재 발생건수·참가자수·근로손실일수 등 대부분 노사분규 관련지표가 상승추세를 보임.

※ 전년동기대비 파업발생건수가 31.5%(70건) 증가하였고 분규참가자도 27.0%(19.5천명) 늘어나며 근로손실일수는 약 2배로 늘어남.

※ 근로손실일수의 배가는 발전산업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 일부 사업장에서 임 단협 관련 파업이 장기간 지속된 때문

※ 노사분규 장기화는 민영화(발전산업노조), 직권중재(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현안에서 노사가 충돌한 결과

<표 4> 노사분규 주요 지표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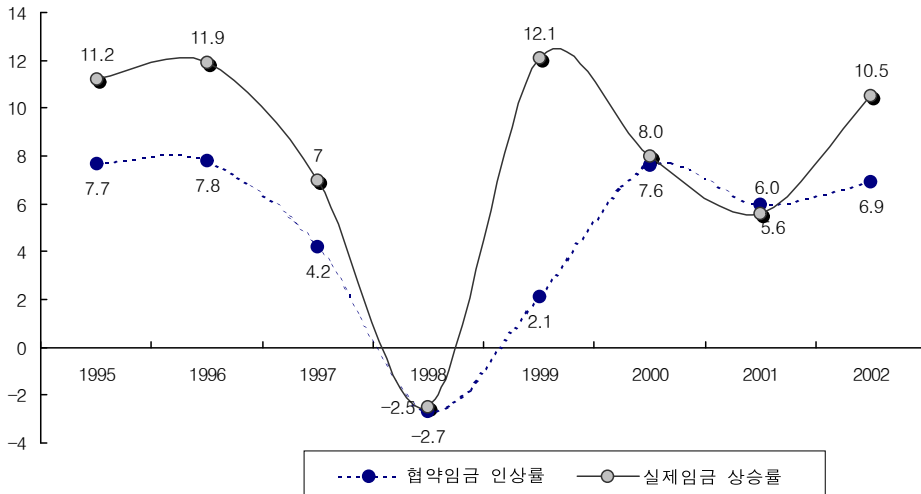
(단위 : 건, 천명, 천일)

	2000. 11. 30	2001. 11. 30	2002. 11. 30
노사분규 발생건수	238	222	292
분규참가자수(천명)	162.5	72.2	91.7
근로손실일수(천일)	1,761.3	799.8	1,537.9

자료 : 노동부.

- 경제성장률의 상승으로 협약임금 인상률은 12월 4일 현재 6.8%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6.0%에 비해 다소 상승
  - ※ 실제임금 상승률(10인 이상 상용근로자)은 10.6%(2002년 9월 기준)로 협약임금 인상률에 비해 3.8%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성과급 및 특별급여의 상승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협약임금 인상률과 실제임금 상승률의 추이



## II. 2003년 노동시장 전망

◆ 2003년 중 취업자는 1.3% 증가하고 실업률은 2.9%로 전망

- 2003년 경제성장률이 5.7%라는 가정하에서 실업률은 2.9% 수준에 머무를 것임.
  - 현재 경기악화의 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으나 경제성장률을 5.7%로 상정한 경우 취업자는 293천명 증가(전년대비 1.3%의 증가율)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하여 경제활동인구가 283천명 증가(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업자는 연평균 10천명 감소한 668천명에 머무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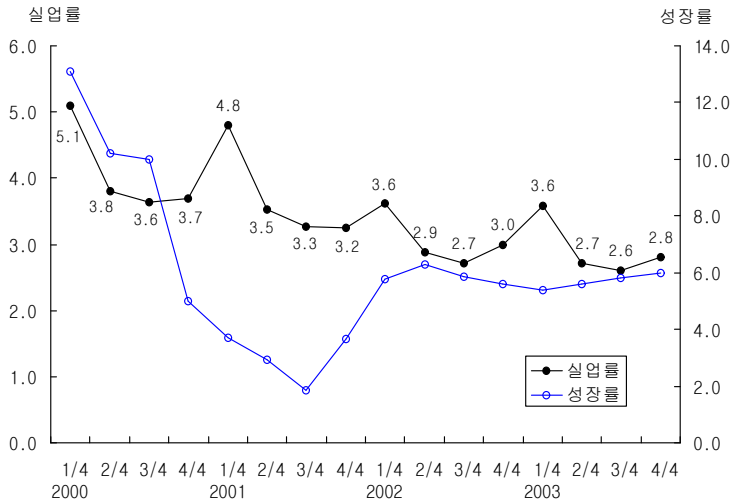
-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중 실업률은 3.6%까지 상승할 것임.
  - 계절적 요인에 의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양상이었으나 경기불투명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현실화될 경우 실업률은 일시적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현상은 신규학졸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므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취업자 증가가 예상을 밑돌아 실업률이 3%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4> 2003년 노동시장 전망

	2003. 전망	2003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	22,868 (1.3)	22,293 (1.3)	23,149 (1.3)	23,033 (1.2)	22,997 (1.2)
경제활동참가율	61.5	60.2	62.3	61.9	61.6
취업자	22,200 (1.3)	21,497 (1.3)	22,521 (1.5)	22,433 (1.4)	22,351 (1.2)
실업자	668	797	629	599	647
실업률	2.9	3.6	2.7	2.6	2.8

주: ( )안은 증가율.

[그림 1]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추이 및 전망



### Ⅲ. 노동시장 정책과제

#### ◆ 중장기 고용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이러한 틀에서 2003년 고용정책을 실시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핵심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고학력화된 청년층의 유희화를 최소화하는 고용정책
  - 고학력화된 여성의 유희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제거하는 고용정책
  - 경제위기 이후 중장년의 유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인력의 충분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고령화에 따르는 재정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정년퇴직제도의 개선을 통한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가 급속하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을 막는 고용정책
  - 취약근로계층(저학력자, 저숙련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특성별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수립 및 이들의 취업알선
- 동절기를 전후한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정책이 급선무
  - 이미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
  - 2002년 중 실시되었던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엄정한 평가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개선 및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
    - ※ 노동부가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및 대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연계하여 대졸 학졸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여 적용
    - ※ 고졸 미진학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저숙련 직무나 중견 중소기업에 취업알선대상으로 하여 기업과 청년을 직접 연계시키는 정책을 강구
    - ※ 고교중퇴자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시행한 후 취업알선
  -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재학생 인턴제’를 실시하되 노동수요측인 기업 및 노동공

급속인 대학의 취업정보실과의 연계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좌우할 것임. 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턴학점제의 도입 및 방학집중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이 인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비의 지원
  - 현존 보육시설의 현황 및 이용자 파악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근거한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마련
  -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비에 대한 지원방안 및 세제혜택의 현실화 방안 마련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여성고용할당제의 강력실시 및 민간부문의 채용, 승진 및 승급, 임금, 해고 등 고용의 각 단계에서 여성차별을 막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
- 중장년층 및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 우리의 경우 일단 일자리를 잃고 나면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중장년층이나 고연령으로 갈수록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안정사업을 통하여 이들의 실직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임.
  - 정년퇴직 예상자에 대해 퇴직후 재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퇴직자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 ※ 예를 들면, 퇴직전과 비교할 때 50~60%의 근무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파트타임 또는 파트워크 고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이 앞장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
  - 또한 저학력자나 저숙련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을 통하여 인적 자원의 특성을 파악한 후 적절한 훈련프로그램(6개월 이상)을 실시하되 훈련이 수후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사후 취업알선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직업상담사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와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함.
-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확충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기존의 실업대책이나 지원정책은 사중효과나 대체효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반면,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거의 없는 것임.
  - 현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동일시되고 있으나 정부조직의 목적은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기존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제거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정부의 대국민서비스 확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무시하지 못할 만한 숫자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새로 발생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직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고용정책의 대상 중 이에 적절한 순으로 일자리를 매치시키는 것이 중요

#### ◆ 정책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노동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정책평가체계는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기존에 실시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활용
  -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었으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편이며 정성적 검토에 그치는 수준
  - 정책수립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뿐 아니라 정책의 실시로 예상되는 효과와 이에 따른 부작용, 정책의 전달체계를 사전분석
    - ※ 정책수립 담당자와 전문가의 긴밀한 연계 및 정책수요조사가 필요
  - 정책실시중/또는 이후 자료에 근거한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발생, 정책의 효율성, 문제점의 발생요인 등 종합적인 진단을 함과 동시에 사전평과와 비교
    - ※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엄정하고 과학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평가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검토를 통하여 종합평가를 마무리
  - 정책의 수립과정 및 시행과정과 정책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사전 또는 사후의 정책평가에는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수
  - ‘하나의 정책, 하나의 자료’라는 기본원칙하에 정책의 목적 및 대상, 효과를 고려하는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
  - 정책 소요예산 중 일정비율(예를 들면, 1/1000)을 기초자료의 구축 및 정책평가에 배정토록 의무화